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산어촌의 미래를 위한 대화
- 농산어촌소멸, 이대로 좋은가?

2023년
12월 7일(목)
14:00~17:00

호텔코리아나(서울 중구)
스테이트퀸룸 7F

주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주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목 차 -

(주제)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과 과제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사례1)

농촌지역 인구감소 대응방안 ----- 17

화순군 구복규 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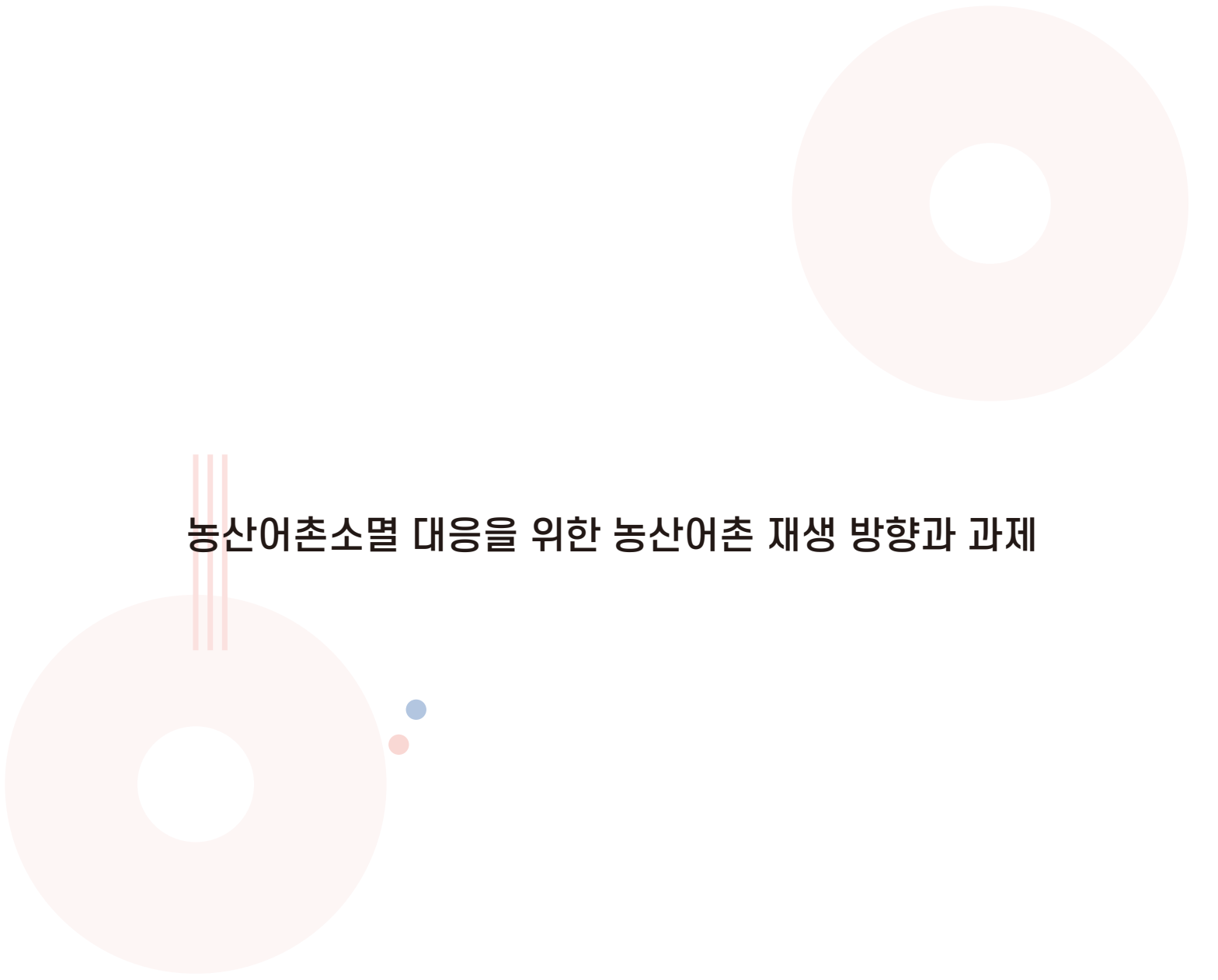
(사례2)

의료복지와 먹거리복지로 지역소멸에 대비하다! ----- 29

청양군 김돈곤 군수

- 일 정 -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등록 및 개회	13:30~14:00(30')	등록
	14:00~14:10(10')	개회식 (개회사)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김주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축사)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
	14:10~14:15(5')	장내정리 / 기념촬영
발제	14:15~15:15(60')	(주제1)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안 - 발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사례1)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대응방안 - 발제 : 화순군 구복규 군수 (사례2) 의료복지와 먹거리복지로 지역소멸에 대비하다! - 발제 : 청양군 김돈곤 군수
휴식	15:15~15:30(15')	휴식 및 토론 준비
패널 토론	15:30~16:50(80')	좌장 :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패널 : 계명대학교 정해준 교수 : 의성군 김주수 군수(전국농어촌지역지역군수협의회 회장) : 거창군 구인모 군수 : 농지연 강정현 사무총장 : 농민신문 김기홍 부장 :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국장 : 국립농업과학원 홍성진 부장 * 필요 시 발제자도 토론 참여
마무리	16:50~17:00(10')	마무리 및 장내 정리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농산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과 과제

성 주 인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ONTENTS

- 1 추진 배경
- 2 농산어촌 인구 문제의 현황과 전망
- 3 추진 방향 및 과제
- 4 제언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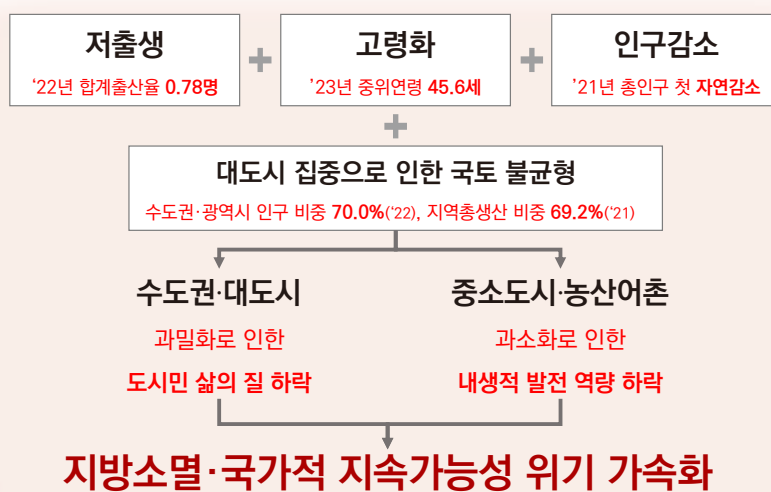
3

1

추진 배경



■ 대도시 집중,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가속



4

■ 지방소멸 대응 논의 속 ‘농산어촌의 소멸’에 대한 의제는 부족

지방소멸

- 행정구역 자치단체 범위 (시·군·구)
- 수도권-비수도권 / 대도시-중소도시 등 지역 간 문제
- 인구감소·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의 성장역량 후퇴



‘농산어촌소멸’

- 실제 정주 생활권 범위 (읍·면)
- 공동체 기능 약화, 농림어업 활동 위축, 자연환경 훼손 등 지역 내 문제
- 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 축소로 인한 국민 삶의 질 저하



대안적 삶·일·쉼 공간의 공백화로 인한
국가적 삶의 질·생산성 저하

5

■ ‘농산어촌소멸’ 집중 대응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굴 필요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

- 농산어촌 정주 여건·공동체 쇠퇴
- 농산어촌의 생산·소비·서비스 기능 위축
- 활력 저하로 인한 소멸 위험 악순환 형성



농산어촌의 소멸

- 지방도시로의 사회적·행정적 부담 가중
- 국민의 경제·정주·휴양 활동 다양성 축소
- 농산어촌이 보유한 공익적 기능 소멸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산어촌소멸 대응
삶, 일, 쉼이 보장되는 농산어촌 재생 방안 마련

6

2. 농산어촌 인구 문제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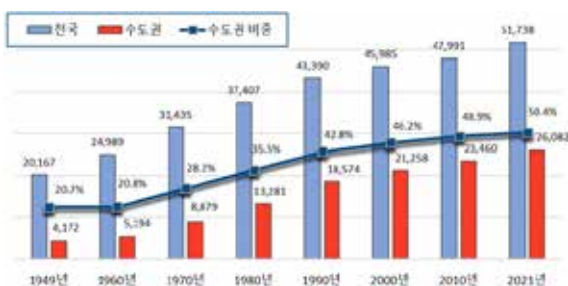
7

2

농산어촌 인구 문제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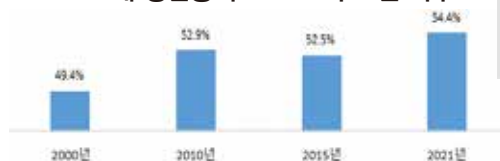


인구 및 경제활동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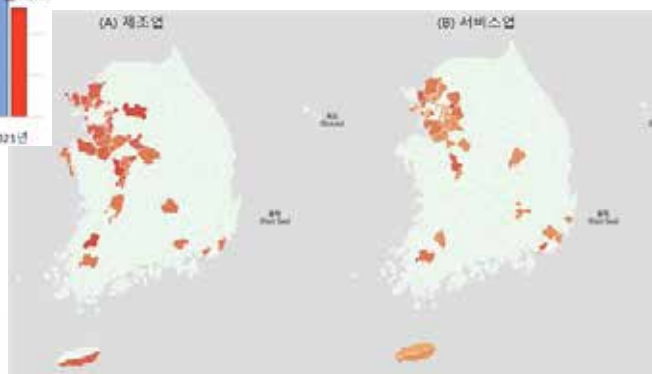


‘21년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20~30대 청년층의 54.4% 수도권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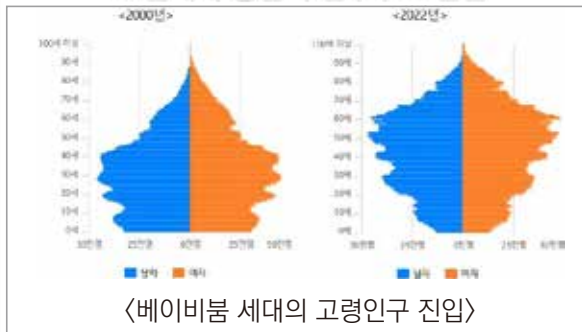
사업체 증가율 상위지역 대도시권 집중 (‘10-’21)



8

■ 국가적 지속가능성 위기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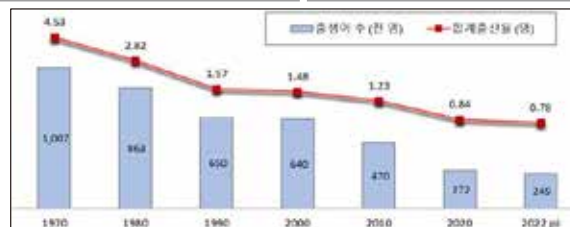
노년세대 중심의 인구구조 전환



후속세대 삶의 질 저하



압력



압력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인한 인구재생산 급감

9

■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과소화 심화

(현재) 귀농·귀촌 추세로 인한 인구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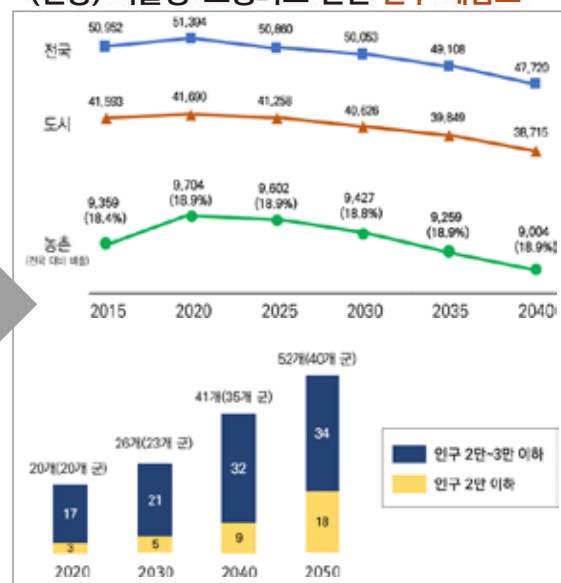


*21년 기준 농촌 인구 약 972만 명(전국 인구의 18.8%)

읍 지역: 약 518만 명

면 지역: 약 453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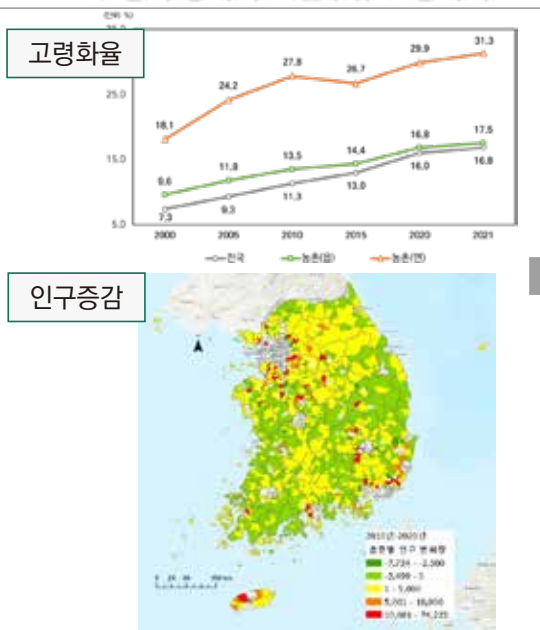
(전망)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재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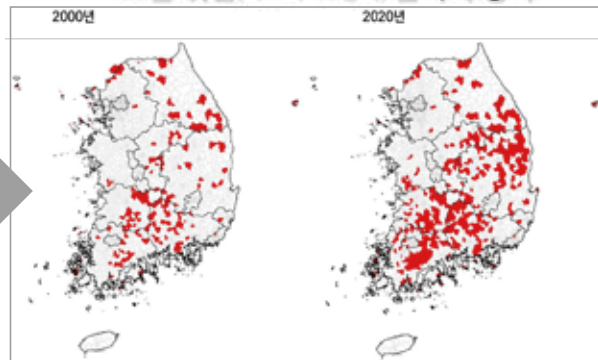
10

■ 농산어촌 인구 문제의 공간적 양극화 추세 강화

고령화 양극화 + 인구규모 양극화



일반·원격 농산어촌의 소멸 위험(과소화+고령화)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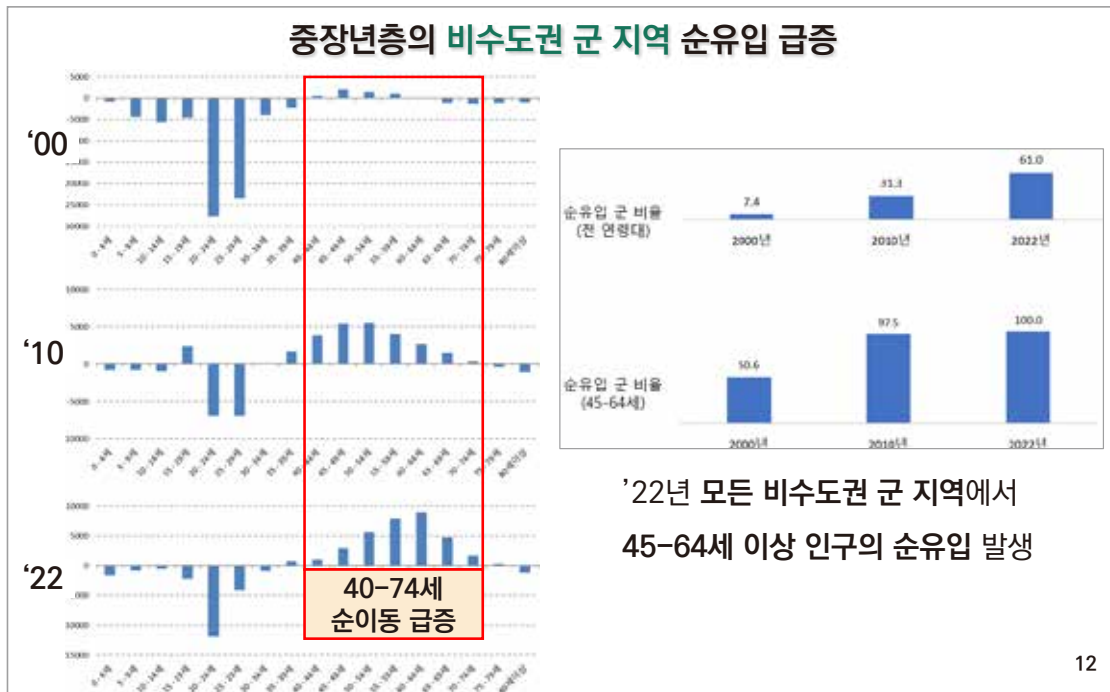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00년: 168곳 -> '20년: 354곳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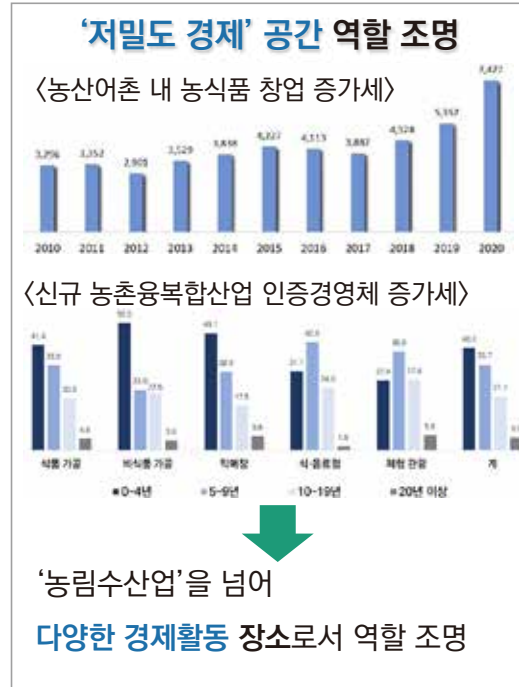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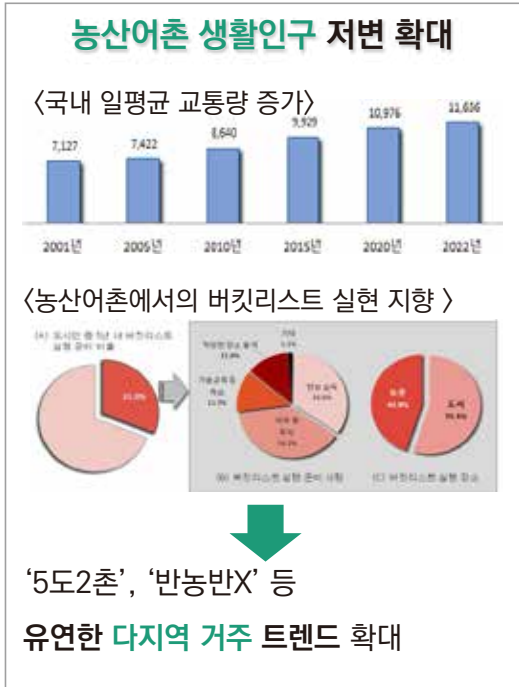
■ 그럼에도, 농산어촌 인구 변화의 새로운 트렌드 등장

중장년층의 비수도권 군 지역 순유입 급증



12

■ 그럼에도, 농산어촌 인구 변화의 새로운 트렌드 등장



13

도농상생의 지향가치와 의의



3. 추진 방향 및 과제

15

3

추진 방향 및 과제



■ 농산어촌 재생을 위한 목표·방향·과제

목 표

삶과 일과 쉼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만들기

방향

- (사람):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일): 농산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 (공간): 국민이 쉬고 싶고, 살고 싶은 농산어촌으로 조성

추진과제

〈전략 1〉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1)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 (2) 생활인구 저변 확대 (3) 농산어촌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전략 2〉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4)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 (5) 농산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육성 (6) 특화자원 기반 스마트 전문화를 통한 저밀도경제 성장
〈전략 3〉 살고 싶은 농산어촌	(7) 다지역 거주 확대 (8) 체류형 농원 확대 (9) 농촌다움 복원

16

■ 〈전략 1〉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1)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

세부과제 (1) 청년 유입 및 활동 지원

취·창업 준비/창업 실행 단계 구분 지원

- 농림수산업 외 다양한 분야 포함
- 농촌협약 등 패키지 사업 활용, 지자체 내 통합적 지원 시책 구축

지역사회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과정 확보

- 대도시-지방자치단체-지역 단체 연계
- 농산어촌에서의 삶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현장중심 프로그램 개발

〈서울시 ‘별의 별 이주OO’〉



〈의성군 도시청년 유치 프로그램〉



17

■ 〈전략 1〉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2) 생활인구 저변 확대

세부과제 (2) 생활인구 저변 확대

‘농산어촌 살아보기’ 확대 위한 공간 조성

- 기존 귀농인의 집 다변화, 빈집 또는 기존 주택을 살아보기 체험 공간으로 조성
- 농촌협약 등 패키지 사업 활용, 지자체 내 통합적 지원 시책 구축

다양한 방식의 지역 활동·기여 프로그램

- 지역 농산어촌 정보와 도시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매칭하는 플랫폼 구축
- 기존 영농 중심 이주·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다변화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



18

■ 〈전략 1〉 사람이 찾는 농산어촌: (3) 농산어촌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세부과제 (3)

농산어촌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시·군당 1만 명의 농산어촌 서포터즈 육성

- 잠재적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이미지 구축 및 농산어촌 가치 확산
- 농림어업·농산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기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발신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존 제도 연계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의 지속적인 지역 후원 유도
- 관계기관·기업과 연계하여 제2의 '1사1촌 운동' 등 신규 캠페인 전개

19

■ 〈전략 2〉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4)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

세부과제 (4)

농산어촌형 일자리 창출

농산어촌 자원 활용 취·창업 및 서비스 확대

- 농산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취·창업 지원 및 신산업 모델 발굴
- 농산어촌의 사회·생활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서비스 산업 확충 및 지원

농산어촌의 치유·휴양 기능 활용 산업 육성

- 도시민의 케어팜, 사회적농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공적 바우처·보험 지원
- 치유·휴양 기능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선진국의 농촌 휴양·치유 지원 제도〉

〈독일〉

- '17년 기준 390여개 휴양치유단지 운영
- 만성질환자의 의료적 관리 목적 방문
- 연매출액 약 35조 원, 의료비 절감 연 4조 원

〈네덜란드〉

- 농업·농촌 연계 그린케어 정책으로 케어팜 추진
- 농가나 농촌조직에서 치료, 재활,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 국내에도 사회적농장 모델로 정책적 도입

20

■ 〈전략 2〉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5) 농산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육성

세부과제 (5) 농산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육성

농산어촌 특화 경제·산업 특구 조성

- 농산어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 환경 조성
- 지역 내 유희시설 개조, 기업지원 서비스 플랫폼, 예비창업자 교육 및 금융 확대 등

특구 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 소멸위기 농산어촌의 기회발전특구를 대상으로 과세면제, 저리금융 등 지원 추진
- 지자체에서 농촌협약을 통해 특구를 신청할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규제 특례를 확대

〈지방시대위원회 4대 특구〉

지방시대 '4대 특구' 개요

 기회발전특구	• 특구 이전 기업에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 • 이전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교육자유특구	• 지역인재 장학금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 우수 지역대학 30개교 집중 육성
 도심융합특구	•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고밀·복합개발 허용 • 도시 중심부의 용적률, 용도, 높이 제한 규제 완화
 문화특구	• 7개 권역별 문화특구 13곳 지정해 200억 원씩 지원 • 지역 가치 창출가·브랜드 1000개 육성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21

■ 〈전략 2〉 일자리가 풍부한 농산어촌: (6) 스마트 전문화 기반 저밀도경제 성장

세부과제 (6) 스마트 전문화 기반 저밀도경제 성장

지역별 특화자원 기반 스마트 전문화 촉진

-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책에 저밀도 경제 혁신 플랫폼을 접목
- 신활력플러스, 농촌융복합지구사업 등의 스마트 전문화 기반 연계 방안 마련

기존 정책사업 연계 신산업·특화산업 육성

- 기존 정책사업을 통해 육성한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발전 지원
- 기반·연관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유치·육성, 신산업기업 지원 등 역량강화 중점 지원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육성 전략(‘23.2)〉



〈저밀도형 성장 전략〉



22

■ 〈전략 3〉 살고 싶은 농산어촌: (7) 다지역 거주 확대

세부과제 (7)

다지역 거주 확대

국민의 농산어촌 다지역 거주 지원

- 5도2촌, 4도3촌, 반농반X 등 증가하는 다지역 거주 수요를 농산어촌에서 실현하도록 지원
-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워케이션·임대주택 거점시설 조성

농산어촌 세컨하우스·임대주택 특례 강화

- 취득세, 종부세 등 다주택자 대상 세제에서 일정 기준 충족 농산어촌 주택의 합산 면제
- 농산어촌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매매시 양도세 유예, 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 등

〈제주 세화리 질그랭이 워케이션 거점센터〉



23

■ 〈전략 3〉 살고 싶은 농산어촌: (8) 체류형 농원 확대

세부과제 (8)

체류형 농원 확대

시민농원 확대를 통한 농산어촌 방문 유도

- 예비 귀농귀촌인 및 관계인구의 일시 거주지로 체류형 농원을 활용
- 도농상생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농산어촌 지자체 연계 체류형 시민농원 확대

농산어촌 난개발 제어를 위한 시민농원 활용

- 농막 등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난개발 압력 체류형 농원으로 흡수
- 농원시설의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지자체 건축조례로 세부내용 구체화 등 제도기반 확보

〈독일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 독일의 임대형 체류농원으로 현재 15,000개 단지에서 100만 개소 농원 운영, 400만 명 참여
- 연방정부에서 지역별 농원 규모를 할당, 가구당 평균 370m²의 텃밭을 배정
- 최근 클라인가르텐 외 도시 유휴부지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



24

■ <전략 3> 살고 싶은 농산어촌: (9) 농촌다움 복원

세부과제 (9)

농촌다움 복원

농산어촌 자산 활용 농촌다움 보전·활용

-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관리해 온 다양한 농산어촌 자산의 보전·활용 지원
- 지자체 차원의 지역농업유산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 관리 및 지원기반 확보

농촌다움을 활용한 경제·공동체 활성화 촉진

- 농촌다움 자원의 조사·보전·활용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및 창업 확대 지원
-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확대하여 ‘국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추진

<영국 글로스터셔의 지역 농촌자원 보전 활동>

- EU LEADER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수립, 마을정비, 유산보전, 지역비즈니스 사업 추진
- 유산복권기금 활용하여 지역자원의 자산화 및 보전, 활용 활동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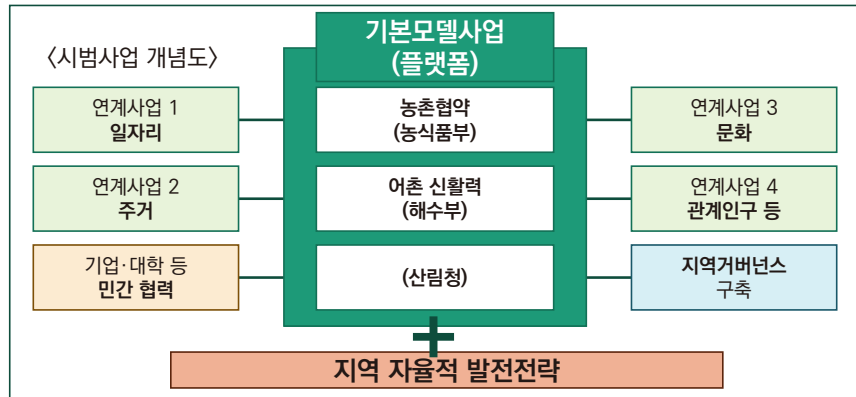


25

4. 제안

26

■ (가칭) 제3의 공간 만들기 사업: 농산어촌 재생 위한 다주체 통합 시범사업



방향	지자체의 자율적 농산어촌 재생을 위한 ‘제3의 공간 만들기 사업’ 추진
역할	- 지자체 계획 바탕 시범지역 선정 - 관계기관, 기업, 단체, 전문가 등 연계 지원
내용 및 방식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주민 주도형 농산어촌 재생 프로젝트 도입 -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기업, 단체의 자원을 대상지에 제공·연계

27

■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구축(농어업위)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 5개 영역 20개 세부지표〉

영역	경제(4개)	보건·복지(4개)	문화·공동체(4개)	환경·안전(4개)	지역회복(4개)
세부					
내용	· 1인당 지역내 총생산 · 고용률 · 시군구 사업체 수 · 재정자립도	· 자살사망률 · 기대수명 · 긴급복지지원율 · 보건복지예산비율	· 삶의 만족도 · 문화시설 접근성 · 사회활동 참여율 · 가족관계 만족도	· 빈집율 · 지역안전도 · 하수도보급률 · 주민 1인당 생활계폐기물처리량	· 합계출산율 · 인구 증감율 · 청년인구 비율 · 교통접근성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 제시

향후계획

- 지역연구원,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예정 (~'24.3월)
- 「농어촌 삶의 질 지표체계 및 지수」 공표 ('24 상반기)
-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 삶의 질 지표 연계·검토 ('24 상·하반기)

28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 주 인

선임연구위원

jiseong@krei.re.kr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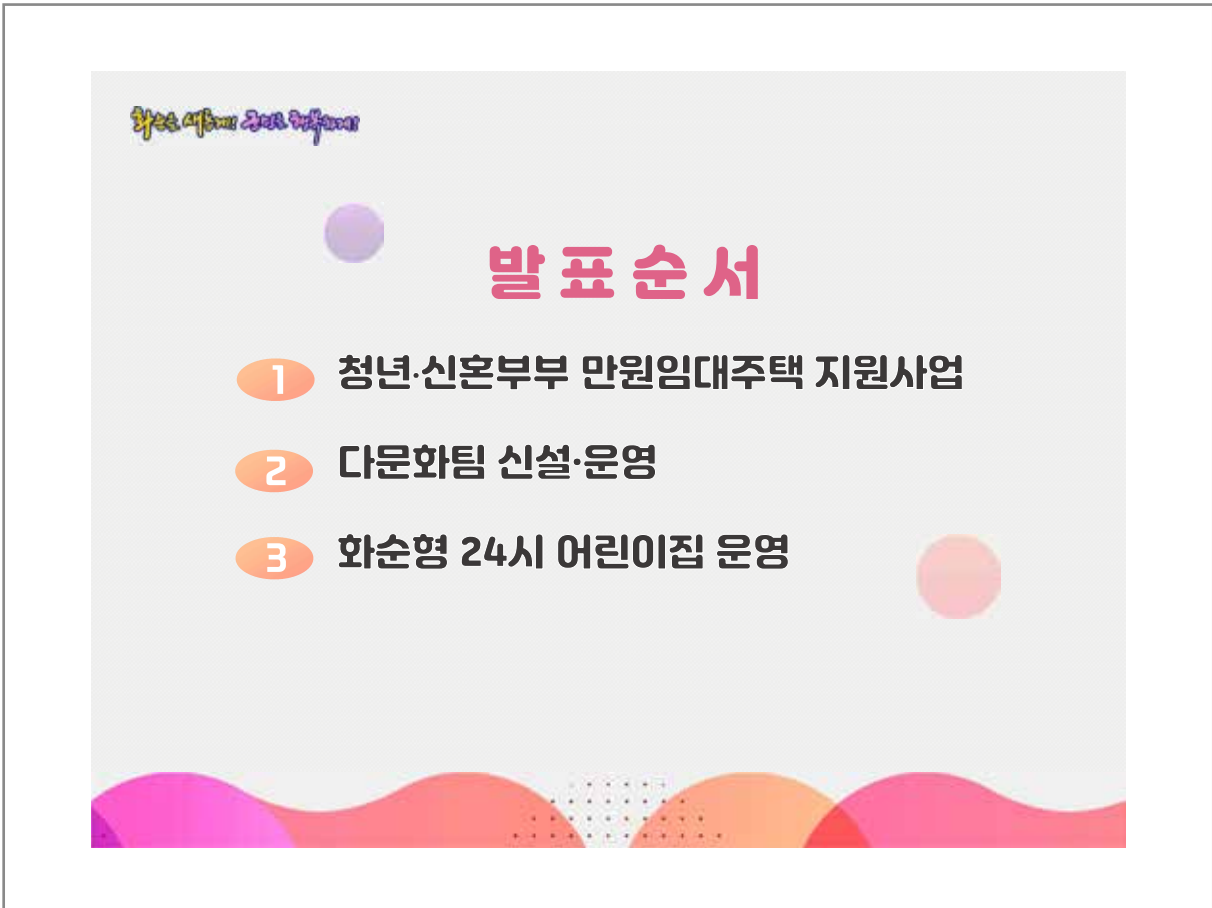
29



농촌지역 인구감소 대응방안

화순군 구복규 군수





화순군 현황



면적	787km ² [임야 576km ² (73%) / 전남도 내 3번째]
인구	6,1393명 [청년 19,054명(32.1%), 노인 18,068명(29%)]
예산	7,506 억원 [일반회계 6,413, 특별회계 1,093]
교통	광주광역시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 매우 양호



추진배경



화순군
자연인구감소 현황
(2022년)

607명



출생
178명



사망
785명

합계출산율
(2022년)

0.74

화순군



0.78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문제, 보육·교육 환경 등 대다수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이
청년인구 유출, 혼인 감소, 저출산과 맞물려 지방소멸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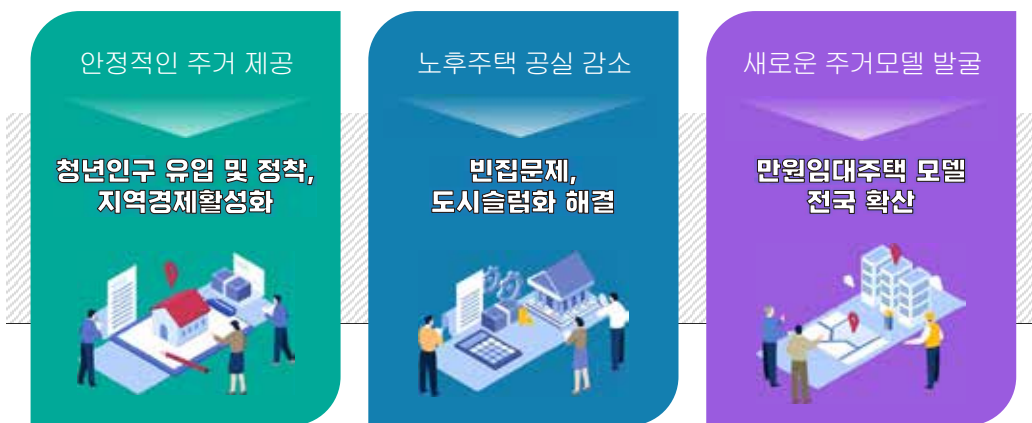


추진내용

“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주요성과



지역소멸위기 탈출의 첫걸음

✓

벤치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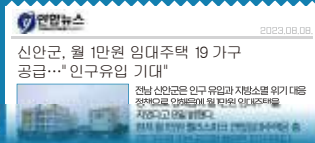
- 광역 3, 기초 14 직접방문
(전라남도의회, 강원도청, 전북도청, 나주시청, 순천시청, 남원시청, 광주 동구청, 김제시청, 익산시청, 거창군청, 서천군청, 여주시의회, 담양군청, 포항시청, 창녕군, 곡성군청, 경주시, 광안시)
- 그 외 지자체 전국각지에서 전화문의 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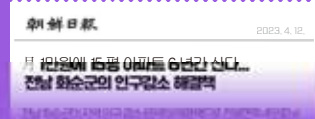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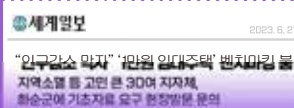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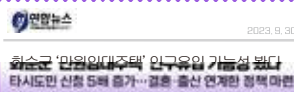
확산사례

- 전라남도 '전남형 만원임대주택'
-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 신안군 '압해읍 임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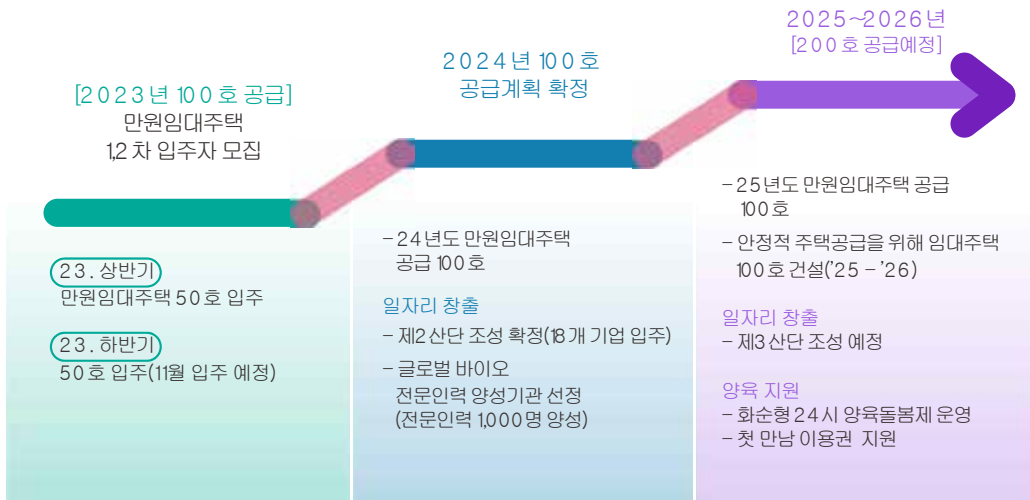
✓

언론보도



청년이 자리 잡는 젊은 도시, 화순군!

4년간 총 400호 공급



화순군의 미래 전략

2

전국 최초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 신설



다문화가족 인구현황



세대수 현황 (국가별)

계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기타
522	87	63	69	228	47	28

❖ 언어적 · 문화적 차이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
(가정불화, 자녀양육, 생활 서비스 정보 부족 등)

- ☑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정적 정착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필요성 대두



☑ 구성현황

- 팀장 1명, 외국 출신 5명 (임기제공무원)
- 5개국 결혼 이주여성 채용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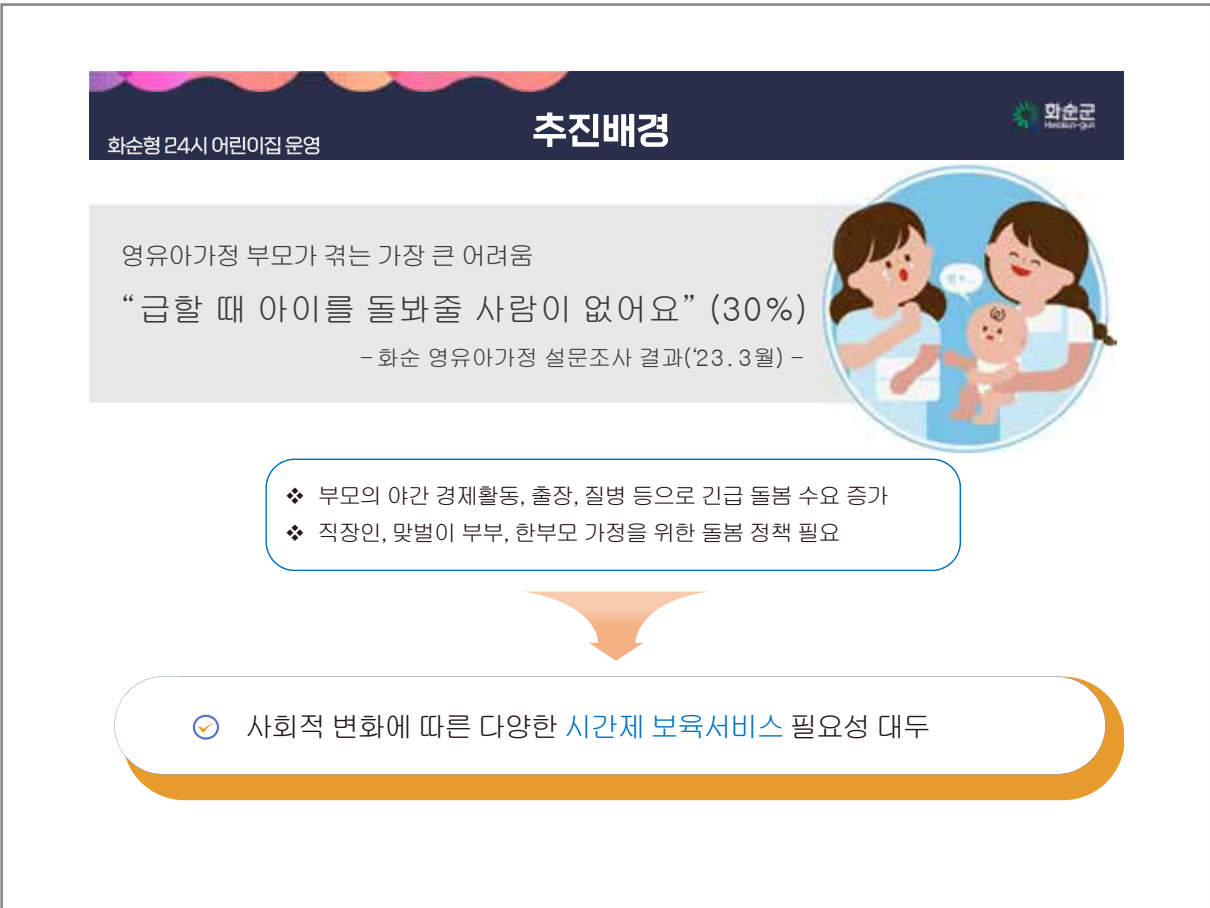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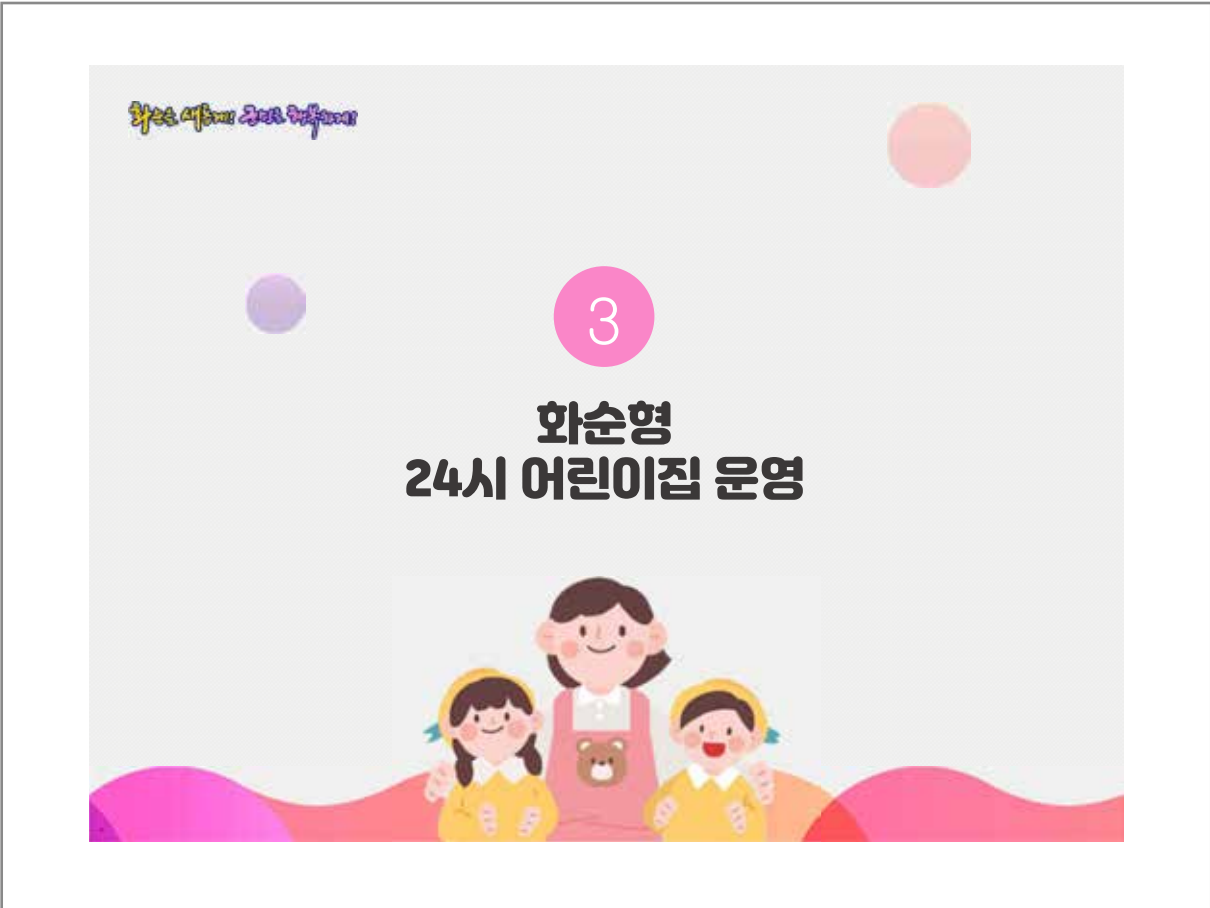
- 방문 및 대면 상담 (생활실태 조사, 생활정보 제공, 긴급복지 대상 발굴)
- 주요시설 방문 동행 및 통·번역서비스 제공 (병원, 은행, 행정기관)
- 가족센터 연계 서비스 강화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20개 사업)



☑ 추진실적

- 전화 및 방문상담 1,700 여건 (통·번역서비스, 일상정보 제공 등)
-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 11건 (주소특자 실직, 질병)
- 군정시책 홍보 30 건 (모국어로 번역 후 SNS 홍보)





사업명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사업목적 보호자의 야간 경제활동, 출장,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긴급 양육공백 완화

사업량 2개소(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대상 생후 6개월 ~ 7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직계존속, 기타 법정보호자)
※ 보호자가 화순군민이거나 화순군 소재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이용가능

이용방법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신청 (이용 당일 15시까지 / 긴급사유 발생시 즉시가능)
(이용금액) 시간당 1천원(월 최대 80시간/ 5명까지 가능)

지원내용 개소당 약 월 1,600만원 지원
(인건비) 보육교사 3명·조리사 1명 (시간제 보육교사 별도 채용)
(일반운영비) 교재비, 간식비, 공공운영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야간보육시설 개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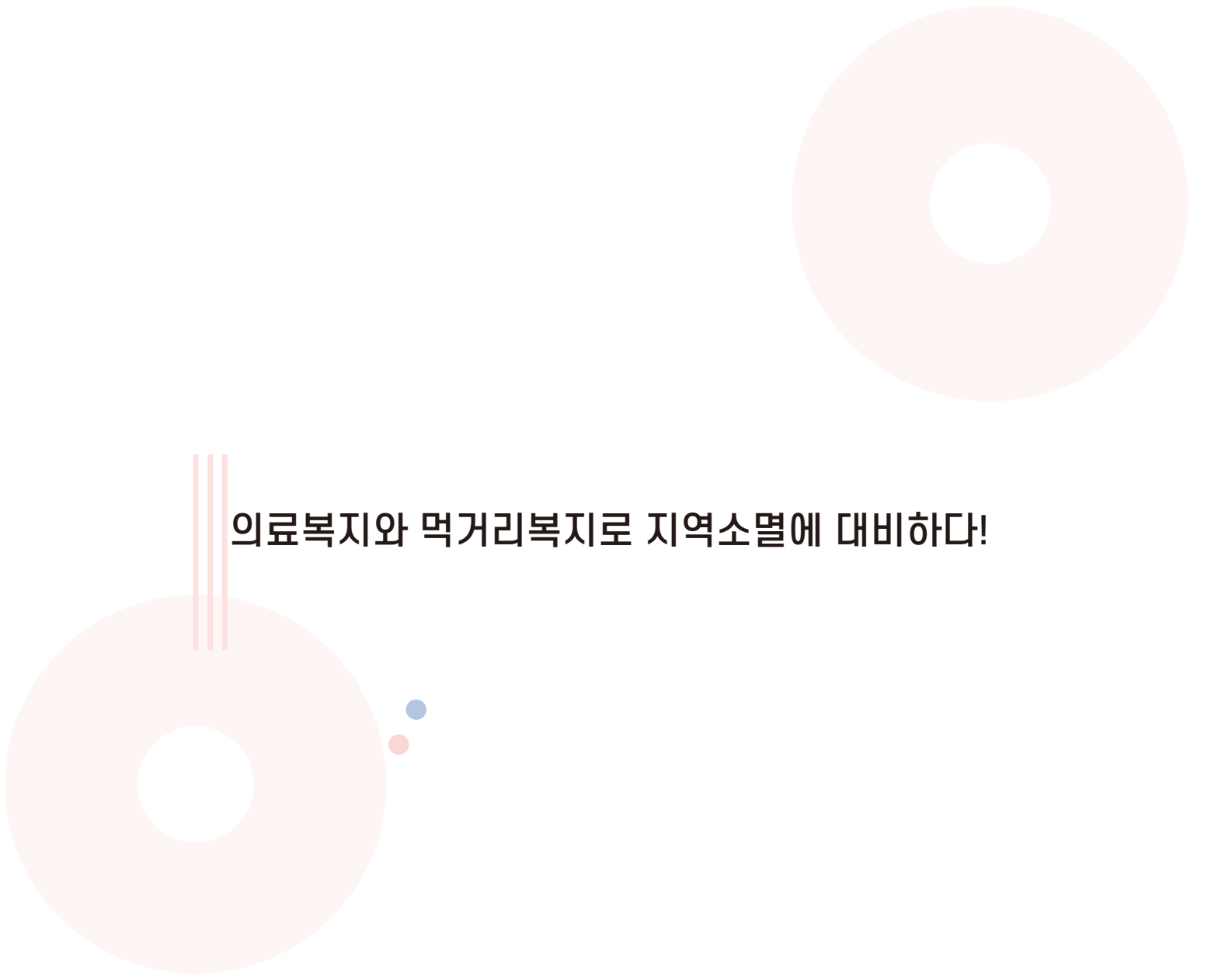


➡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으로 양육자 만족도 제고

감사합니다

“ 화순군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의료복지와 먹거리복지로 지역소멸에 대비하다!

청양군 김돈곤 군수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의료복지와 먹거리복지로 지역소멸에 대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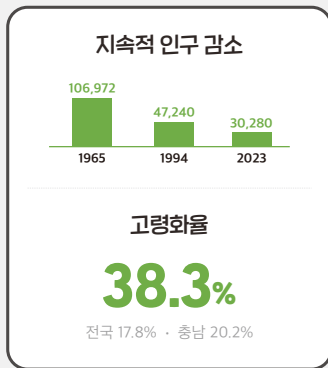
목차

- I. 청양군 현황
- II. 의료복지 추진사항
- III. 의료복지 주요성과
- IV. 먹거리복지(푸드플랜) 추진사항
- V. 먹거리복지(푸드플랜) 주요성과
- VI. 향후 계획
- VII. 보도자료



I. 청양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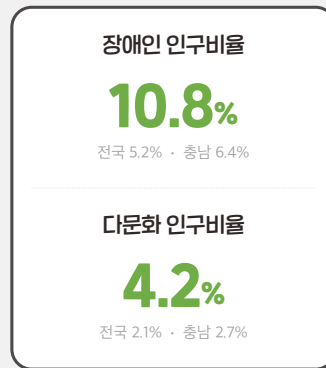
① 인구 현황



② 경제 현황



③ 취약계층 현황



의료 및 먹거리 복지를 통한 ▶ **획기적 인구소멸 대응 필요**

03

I. 청양군 현황

의료복지 배경

- **의료시설 불충분**
 - ※ 요양병원 2, 의원 17, 치과 7, 보건의료원 1
 - ※ 최근 1년 개원 사례 없음
 - ※ 안과 부재
- **보건의료원 안과 의사 부재**
 - ※ 다방면의 노력에도 안과 의사 채용 어려움
- **고령자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필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필요

먹거리복지 배경

- **높은 농업인 비율**
 - ※ 전체 인구의 52.7%가 농업인에 해당
 - ※ 농업인의 고령화·저소득 문제
- **총 재배면적 11,378 ha**
 - ※ 중소농(1.0ha 미만)이 전체 경영체의 72.6% 차지
- **먹거리 취약계층 문제**
 - ※ 전체 인구의 5.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81명)

농가 소득·먹거리 돌봄을 위한
푸드플랜 시스템 구축 필요

04

II. 의료복지 추진사항

①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 서남부권 응급의료체계 강화 (도지사 공약)

- ※ 권역병원(단국대학교병원)과 상시적 응급의료 협력체계 마련
- ※ 응급환자 발생 시 중증도에 따라 적정의료기관에서 적기 치료 가능

□ 전문의사 2명·간호사 2명 채용

□ 최신 의료장비 구비 (278백만원)

- ※ 자동 흉부압박기 외 골밀도측정기 등 최신장비 구비

□ 응급의료기관 평가 법정 기준 충족

- ※ 시설, 장비, 인력 등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조건 유지



골밀도측정기



자동 흉부압박기

05

II. 의료복지 추진사항

② 건강검진센터 설치 및 운영

□ 국가 5대암 '원스톱 시스템' 구축 시행

- ※ 5대 암검진 불가 지자체 (3개소) 탈피

□ 65세 이상 무료 혈액종합검진·폐 CT검사 등

□ 건강검진이상자 조기발견 180건·건강검진 수입 411백만원

- ※ 위암4, 식도암1, 유방질환59, 자궁질환8, 간질환35, 폐질환22, 혈중51

□ 최신 의료장비 설치

- ※ CT기, 내시경, 유방촬영기, 흉부방사선 촬영기, 골밀도측정기 등
- ※ 검진에 대한 신뢰성 확보하는 의료행정 추진



06

II. 의료복지 추진사항

③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순회진료

- 대상자 : 면 의료취약계층, 거동불편자, 고령자환자 등
- 25인승 진료버스 운영
 - ※ 주중 4회 · 주말(토요일) 4회 방문 -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10명 방문
 - ※ 물리치료기, 심전도기, 원심분리기 등 전문의료장비 구비
 - ※ 충남 지자체 중 유일한 시책
- 진료 확대 : 2023. 9. 부터 월 1회 단국대 치과병원 협진
- 수해인원
 - ※ 총 54회 (1,588명)
 - ※ 수해지역 특별 순회진료 총 23회 (706명)



07

II. 의료복지 추진사항

④ 정산 통합보건지소 신축

- 사업비 : 25억 원
- 산동 4개면 의료접근성 강화 ('23. 11. 준공)
- 외래진료 · 보건사업 등 보건 서비스 제공
- 제증명(신체검사, 보건증 등) 발급 기능



⑤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신축

- 사업비 : 42억 원
- 쾌적한 의료원 이용 유도 ('23. 12. 준공)
- 연면적 2,550m² (772평)
- 지상 2층 (총 77대 주차 가능)



08

II. 의료복지 추진사항

⑥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전국 최초] 주거 + 돌봄 + 보건의료 융복합 시설

복지주택 + 행정지원센터 + 사회복지관 + 재택의료센터 + 통합재가센터 + 세어형주택

- 규모 : 영구임대 127호 (24~36㎡)
- 운영 : LH(주택) + 청양군(복지시설 2,450㎡)
-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316
- 추진현황 : '19 사업선정 → '23.7 준공

※ 26A형75세대, 36A형42세대, **세어형(24A) 10세대**
 ※ 주거약자를 위한BF(Barrier Free) 설계
 ※ 옥상정원 및텃밭, 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09

III. 의료복지 주요성과

▶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및 이용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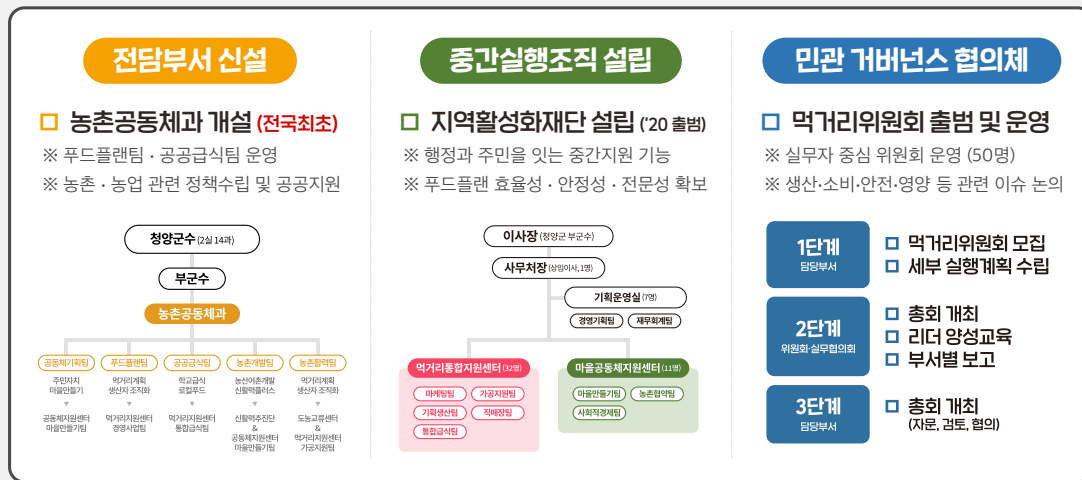
- **외래진료** 79,735명 · 진료수입 1,967백만원 달성
- **건강검진** 12,969건 · 진료수입 411백만원 달성
- 「방문건강관리」 방문횟수 8,316회 · 1,211가구(2,760명)
- 「찾아가는 의료원」 마을순회진료 총 54회 · 1,588명 진료
- 자살예방사업 충청남도 3위 달성 (2021년 11위 → 2022년 3위)
- 「전립선 무료 검진」 전립선 진료 및 건강강좌 437명 실시
 ※ 정상 16명(3.7%), 배뇨장애 증상 378명(86.5%), 의심 43명(9.8%)
-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전국최초 **주거+돌봄+보건의료** 융복합시설)



10

IV. 먹거리복지(푸드플랜) 추진사항

① 푸드플랜 공공지원체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11

IV. 먹거리복지(푸드플랜) 추진사항

② 먹거리 기반시설 구축 및 집적화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 위치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19,126m²)
- 운영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관리위탁)
- 1차 조성 공공급식, 종합가공, 안전성, 홍보관
- 2차 조성 전처리, 산채가공, 구기자, 친환경

청양 먹거리 직매장 (유성점)

- 위치 대전 유성구 학하동 (연면적 2,207m²)
- 운영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관리위탁)
- 1층 먹거리 직매장, 정육(청양축협), 베이커리
- 2층 레스토랑(협동조합), 카페(협동조합)
- 3층 주민 소통공간

12

IV. 먹거리복지(푸드플랜) 추진사항

③ 농민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먹거리 정책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학교·공공급식·대전 직매장 등 푸드플랜 출하 농업인 대상

소득보전액 **180백만원** (1,320건)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235농가)

청양 농산물 군수 품질인증제 5단계 · 15실천과제 시스템



[인증혜택]

품질인증 포장재 및 스티커, 제초매트, 농기구정리대, 농약보관함, 농산물작업대, 동절기 생산보완시설 등 지원 (80% 보조)



13

IV. 먹거리복지(푸드플랜) 추진사항

④ 안전한 농산물과 연중 공급체계 구축으로 관계시장 확대

기존 조직 및 향후 사업 연계성을 고려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 ① 안전성검사 의무화 정책 시행
※ 잔류농약 463종, 중금속 2종
※ 분기별 / 전품목
- ② 소규모 재배시설 보급으로 생산 기반시설 확충
- ③ 신규 농가 발굴을 위한 통합 교육 (매월 1회)
- ④ 기존 농가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보수 교육 (분기별 1회)



기획생산 950농가 구축 ▶ 연중 공급체계 구축

14

V. 먹거리복지(푸드플랜) 주요성과

▶ 청양형 푸드플랜 시스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확대 성과

- 지역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농촌형) 선정('18년)
- 먹거리 **전담부서** 신설
 - ▶ 농촌공동체과('19년) + 지역활성화재단 먹거리통합지원센터('20년)
- 청양먹거리직매장 **유성점** 개장('20년) ▶ 재단 위탁운영
- 청양산 식재료 **공급 확대**('20년 9월 ~)
 - ▶ 관내·외 학교(공공)급식, 기업체, 식당 등 **228개소**
- 대전지역 공공기관(철도청, 화학연구원) **로컬푸드 공급 MOU**('21년 8월)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로컬푸드공급MOU**('22년 2월)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누적매출 ··· 억원** 달성('23년 10월)
- 일자리 **직접채용 50명**(지역활성화재단)
- 농민가공센터 **42명** 참여 + 푸드플랜 참여 농가 **9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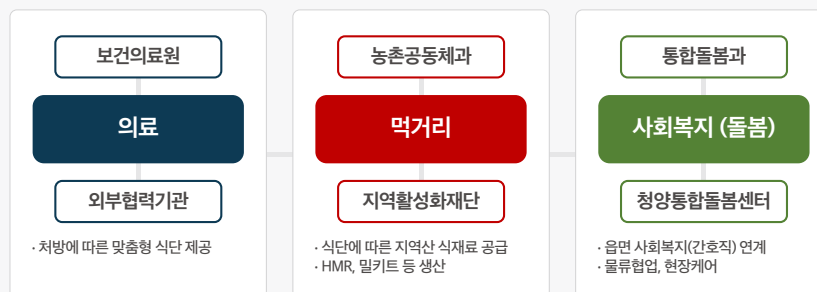


15

VI. 향후 계획

- ▶ 푸드플랜의 꽃은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의 실현!
- ▶ 의료-먹거리-사회복지(돌봄)를 연계한 취약계층 복지급식의 통합체계 확립

주요 기능별 추진과제



▶ **통합돌봄센터 보건복지전달체계 부문과 농촌협약 연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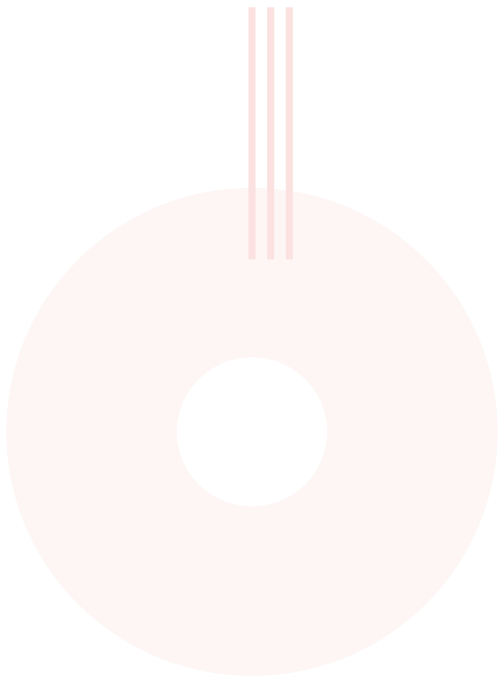
VII. 보도자료



의료복지와 먹거리복지로
지역소멸에 대비하다!

감사합니다

청양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